

전북특별자치도 미래·비전 정립

도, 비전위원회 가동
생명경제 핵심 삼아
전북 고유 가치·미래
담은 비전 체계 공식화

전북도는 지난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비전위원회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비전위원회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민대표, 자치분권, 도시개발, 투자유치, 농생명, 교육, 문화관광, 산림환경 등 8개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사항과 비전(안)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비전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으며, 기초단체의 비전을 오는 4월까지 구체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협의했다.

앞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와 관련 비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전북형 특색 발굴과 동시에 비전 설정에 대한 내부 준비를 병행해 왔으며, 특별자치도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생명경제'라는 큰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는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시군 설명회, 각종 세미나를 진행해 '생명경제'의 큰 틀을 선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모아왔으며, 그 의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을 정립하기 위한 비전위원회 1차회의가 지난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민대표, 자치분권, 도시개발, 투자유치, 농생명, 교육, 문화관광, 산림환경 등 8개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견을 적극 반영해 이날 비전위원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비전의 밑그림을 선보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첫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특별한 전북의 미래를 담은 목표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비전 정립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전북도의 고유한 가치와 미래상을 담은 비전을 그려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도는 5월 초에 민간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의지결집 및 국회 입법지원을 위해 출현인사와 주요인사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출범식에 맞춰 비전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 최대 현안 ‘대광법 통과’ 온 힘 다하자”

김관영 도지사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전력” 당부
미세먼지 관련 “엔제든 비상저감조치 시행토록 실국별 대응체계 점검”

김관영 도지사가 지금 전북 최대 현안은 대광법 통과라고 밝히며 법안 통과를 제의 목표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4일 전북도청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 교통법안소위에서 심사보류된 대광법(광역교통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성공하는 사례를 더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대광법이 통과되면 전북 경제 전반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이어 4월 국회 임시회에서 국립의전원법이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 논리 보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CEM코리아뉴에너지리얼드 합작법인의 1조2000억원 투자결정을 계기로 이차전지 100여개사 기업유치 및 일자리 4천개 창출을 목표로 이차전지 혁신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정착, 전후방 산업인 탄소, 상용차, 재생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부흥과도 직결돼 있는데다 충북·경북·울산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대일 수출기업에 기회가 찾아올 것이므로, 전북 수출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도내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시 언제든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실국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철자를 기하라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전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내달 시행

김정기 도의원 대표발의... 시설개선·기술 향상·환경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
“자동차정비업 뿐만 아니라 도내 산업군 원만한 전환준비 위해 적극 지원을”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도내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 정비사업자와 종사자 대상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종사자 정비 기술 향상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 정비업체 경영진단 및 상담 지원 등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전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전북도와 정부는 수년 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전환경차의 점검·정비 및 기술인에 대한 인력 개발과 교육 지원, 안전점검장비 구축에 대한 정책

은 전문한 상황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전기·수소차의 확대 보급에 따른 내연기관차 중심 자동차 전문정비업 종사자의 일거리 감소에 대해 역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자동차 부문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점유율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정비업(카센터)의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와 자동차 에너지 전환에 따른 주유업체의 수요감소 등에 대한 대책

은 거의 없다. 김정기 의원은 작년 말 전북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당시 대중교통차량 중 수소와 전기차를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는 2020년 9대에서 2022년 누적 40대, 택시는 2020년 1대에서 2022년 누적 107대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이용에 필요한 충전소, 정비업체 등의 부대시설 및 부가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전북도 친환경차 정책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동차정비업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정책전환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도내 산업군들의 원만한 전환준비를 위해 도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김정기 도의원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김염병 예방의 지름길

4·5 전주를 재선거 후보자들 첫 주말 유세

지역 곳곳 돌며 지지 호소
군산시의원 나선거 후보들도
동네 누비며 이름 알리기 나서

4·5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운동 첫 주말인 지난 25일, 후보들은 일제히 유세장에 나섰다.

먼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중리리 모악산 입구와 완산 체련공원 등에서 등산객과 축구 동호인들에게 “안정적 정권을 토대로 경제 발전을 앞당기려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석희 후보도 각종 시민 모임에 참석하고 생활체육 현장을 찾아 “민생 민주주의, 지방의 위기라는 큰 여의의 삼각포도가 밀려오는 엄청난 현상 앞에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진보 후보의 손을 잡아 달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게이트볼대회와 문화대공원

에서 개최된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해 “이번 재선거는 무능 폭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저의 당선이 무능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썰리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안해욱 후보도 서신동 광진사거리와 진북동 주택가 등을 돌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쳤다.

무소속 김희서 후보는 서신동 롯데 아파트와 마갈리촌 등에서 “일 잘하고 준비된 깨끗한 후보”라며 “시민들이 힘을 한데 모으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표심을 자극했다.

한편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군산시의원 나선거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중삼 후보(57),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60), 무소속 윤요섭(62)·김용권 후보(58) 등 4명도 동네를 누비며 이름 알리기

에 나섰다. /특별취재반

전북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 공모에 전북대 선정

전북도는 환경부가 실시한 전북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 공모사업에 전북대학교가 선정돼 앞으로 5년간 전북도 환경보건센터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는 지정기간 동안 환경부와 전북도로부터 각 2억8,000만원씩 매년 5억6,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전라북도 환경보건 정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성질환 피해사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 환경성질환 조사·연구, 지역 이슈 대응, 위해 소문 및 DB구축, 전문인력 육성, 교육·홍보 등을 담당하는 지역 내 전문기관이다.

전북도는 센터의 운영을 통해 지역 중상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환경성질환 사전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환경보건 정책 추진으로 도내 환경보건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여 전국에서도 명실상부한 환경보건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센터장으로는 전북대학교 손정우 교수(의과대학) 역할을 맡아 환경공학과와 협업하여 올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환경보건분야 데이터 수집 등 기반을 구축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취약지역 건강모니터링 및 환경유해인자 조사·감시 강화를 통해 도내 환경보건 현안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성질환, 환경보건교육으로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임대인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 미리 통지

민주 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대표 발의



최근 전국적으로 광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보증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대인의 계약상계 선택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비지 임대인’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광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비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인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인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통지받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계속해서 주택 소유권 양도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계약체결 내용을 통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자명한 만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대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인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 윤준병 의원은 사건종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 제6조의8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제3자변제, 헌법에 반하는 행위”

완주군의회,尹정부 굴욕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완주군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24일 성중기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채택했다.

성중기 의원은 “104주년 3·1절 기념사부터 3·1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대통령이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었다”며 결의문 발의 사유를 제시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내용을 뒤집는 제3자변제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사법주권을 버린 행위이자 반 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년 동안 투쟁해온 피해자들의 대한 기망이자,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는 또 다른 가해

라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주의’의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성 의원은 “이와 같은 행위는 향후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일본정부가 힘을 실어줄 외교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우리 국토를 침탈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은 일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의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인권적인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일방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굴욕적인 외교를 즉시 중단하며,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주=이종복 기자